

임금불평등 추이에 대한 분석

성재민 · 정성미*

I. 머리말

소득 불평등 연구들을 보면 근로소득이 가장 중요한 불평등의 원천이라고 한다. 외국의 연구들은 임금불평등(wage inequality) 증가의 원인으로 기술변화, 일자리 양극화, 해외 아웃소싱 증대의 영향, 노동조합이나 최저임금 약화와 같은 제도 변화, 고령화 등 다양한 요인의 설명력을 검증해 왔다. 여기서는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장기 시계열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임금불평등의 추세를 요약하고자 한다. 이 자료는 비농업, 민간 부문의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 대해 대표성을 갖는 우리나라 유일의 미시 자료로, 1970년대 자료부터 구축되어 있다. 분석을 위해 제II장에서 1980년부터 우리나라 임금불평등의 추이를 월평균 임금과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정리한 후, 제III장에서 인구학적, 사업체특성 집단별로 구분해 각 집단 안에서도 전체적인 임금불평등 추이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III장부터 분석대상은 남성애 한정하였다. 여성은 노동시장 참가 패턴이 지난 약 30여 년의 기간 동안 크게 변화해 왔기 때문에 남성과는 임금 불평등 추이 자체가 다소 차이가 있고, 이러한 노동시장 참가 패턴 자체를 분석대상으로 삼아야만 보다 유의미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분석상의 복잡함이 있기 때문이다.

제IV장에서는 각 집단 간 격차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임금불평등은 세부 집단 안에서 또는 집단 간에 격차가 벌어지면 증가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증가할 수 있다. 이를 테면, 원래 불평등 수준이 높은 집단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임금불평등이 증대될 수 있다. 2000년대 후반부터 이슈가 된 인구고령화나 1980년대 이래 꾸준히 지속되어 온 고학력화, 비교적 불평등 수준이 낮은 제조업 고용이 감소하고 불평등 수준이 높은

* 성재민=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seongjm@kli.re.kr).

정성미=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smjung@kli.re.kr).

서비스업 고용이 증가하는 서비스산업화 같은 현상은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아도 임금불평등 수준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제 V 장에서는 이와 같은 인구학적 변화와 사업체 특성 분포 변화가 임금불평등 변화를 얼마나 설명하는지 분석하였다.

II. 총 괄

비농전산업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임금과 시간당 임금의 지니계수와 분위수 배율 지표¹⁾로 임금불평등의 장기변화를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지니계수는 월평균 임금과 시간당 임금 모두에서 198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다 1994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09년까지 경향을 지속하였다. 2009년 이후에는 월평균 임금과 시간당 임금 모두에서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월평균 임금에서 2011년 증가한 반면 시간당 임금에서는 2010년 이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니계수로 본 임금불평등은 전반적으로 2009년 이전까지 급증하다 이후 다소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

분위수 배율 가운데 p90/10(하위 10%의 임금 대비 상위 90%의 임금의 비율)은 지니계수의 추세와 매우 유사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월평균 임금으로 본 p90/10은 2009년 이후 감소한 후 증가하였지만, 시간당 임금으로 본 p90/10은 2009년 이후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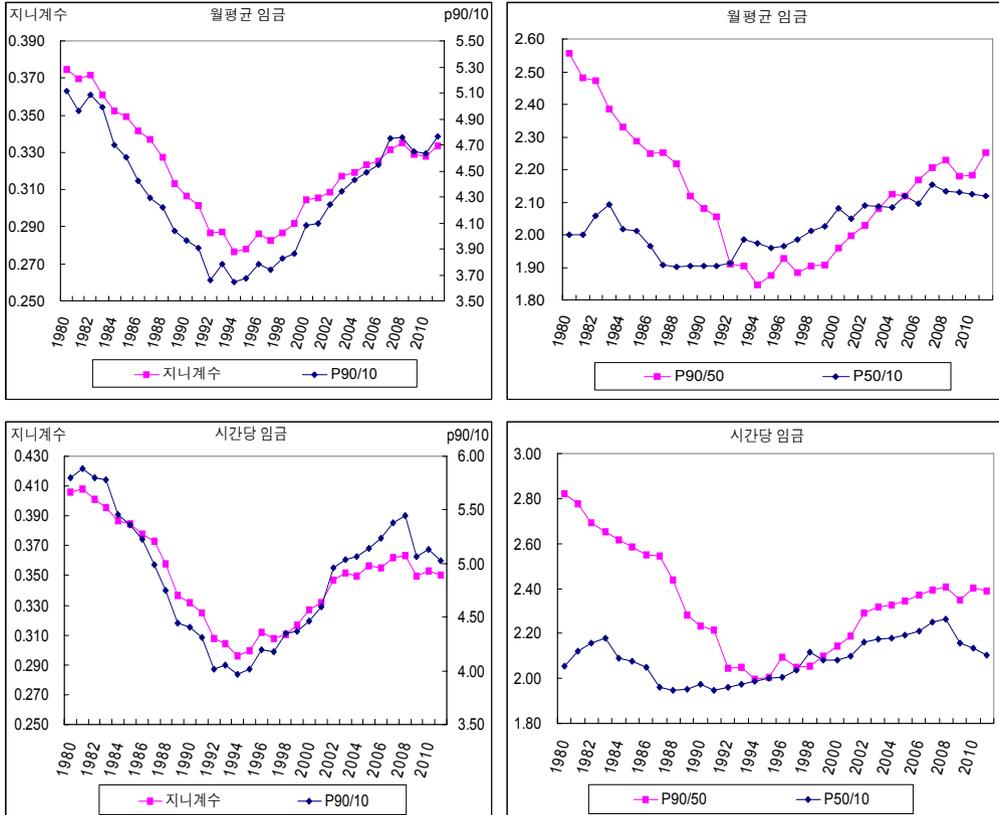
[그림 1]의 우측의 상단과 하단의 그래프는 중위임금인 50%에서의 임금을 기준으로 상위 90%와의 격차인 p90/50과 하위 10%와의 격차인 p50/10을 보이고 있다. 먼저 중/상위 임금계층의 격차인 p90/50은 월평균 임금과 시간당 임금의 추세가 비교적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1994년까지 하락하다가 이후 2008년까지 상승하였고, 2009년 감소한 후 소폭 증가했음을 보이고 있다. 다만 시간당 임금으로 보면 1994년 이후 중/상위 임금격차가 월평균 임금보다 다소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차이는 확인할 수 있다.

중/하위 임금계층 격차인 p50/10은 1994년이 변화의 지점이던 다른 분위수 배율과는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월평균 임금과 시간당 임금 모두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80년대 중반 이후 격차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008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시간당 임금의 경우 2009년 이후 가파르게 감소하는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월평균 임금으로 보면, 90년대 초까지는 중/상위(p90/50) 격차가 중/하위(p50/10) 격차보

1) 지니계수는 0~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낮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분위수 배율은 소득수준을 10분위로 나누고 각 분위수를 배수화한 수치로 수치가 높을수록 불평등 정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그림 1] 지니계수와 분위수 배율(월평균 임금/시간당 임금)



주: 비농전산업 1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총액(정액급여+초과급여+전년도 연간특별급여/12)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 각 연도.

다 커 중/상위 불평등이 더 높게 나타났지만 90년대 초반 이후 경향이 역전되어 중/하위 (p50/10)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고, 이러한 경향은 2006년을 기점으로 다시 역전되었다. 시간당 임금으로 보면, 1994~1999년을 제외하고 중/상위(p90/50)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남을 보이고 있다.

조사대상을 5인 이상이나 1인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소규모 사업체가 포함되어 임금불평등이 증가할 수 있다. 이때 1인 이상의 자료는 2008년 이후부터 가능한 관계로 4개년의 변화추세를 살펴보도록 한다.

<표 1>을 보면 p90/10과 p90/50은 월평균 임금과 시간당 임금 모두 10인 이상과 5인 이상의 임금격차는 유사하지만, 1인 이상의 임금격차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규모 사업체가 포함되었을 때 임금불평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편 5인 이상과 1인 이상은 전체적으로 10인 이상의 2008년 이후의 추세와 유사한 흐름이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표 1〉 조사 규모별 분위수 배율(월평균 임금/시간당 임금)

	연도	월평균 임금			시간당 임금		
		P90/10	P90/50	P50/10	P90/10	P90/50	P50/10
10인 이상	2008	4.75	2.23	2.13	5.45	2.41	2.26
	2009	4.65	2.18	2.13	5.07	2.35	2.16
	2010	4.63	2.18	2.12	5.13	2.40	2.14
	2011	4.77	2.25	2.12	5.03	2.39	2.10
5인 이상	2008	4.77	2.29	2.08	5.43	2.48	2.19
	2009	4.68	2.24	2.08	5.05	2.42	2.09
	2010	4.69	2.25	2.09	5.12	2.46	2.08
	2011	4.82	2.31	2.09	5.02	2.44	2.05
1인 이상	2008	5.61	2.55	2.20	5.91	2.69	2.20
	2009	5.60	2.50	2.24	5.54	2.61	2.12
	2010	5.79	2.52	2.30	5.61	2.67	2.10
	2011	5.98	2.55	2.35	5.42	2.63	2.06

주: 1) 임금총액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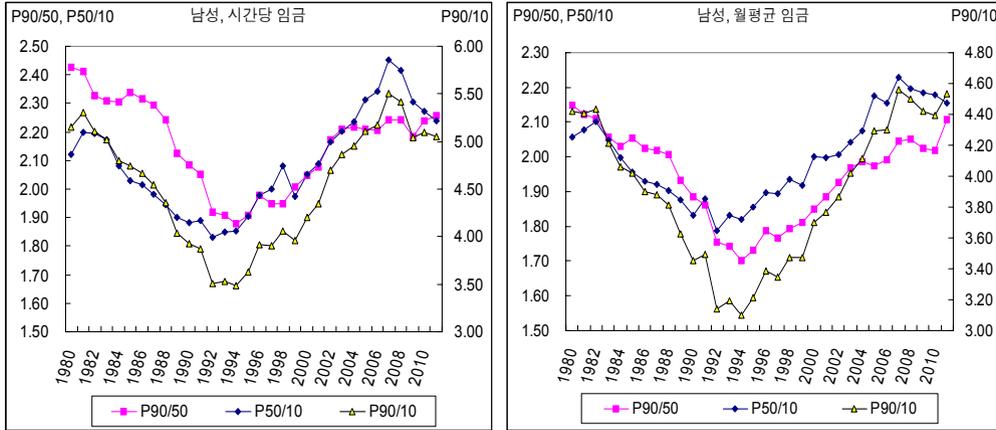
2) 10인 이상과 5인 이상 기준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를, 1인 이상 기준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이용함.
 자료: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및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러나 p50/10은 월평균 임금과 시간당 임금의 변화가 상이하다. 시간당 임금으로 보면, 1인 이상의 임금격차가 p90/10, p90/50의 임금격차와 유사하고, 2008년 이후의 추세도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월평균 임금에서는 1인 이상의 임금격차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과 달리 p90/10, p90/50은 2008년 이후 임금격차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즉 근로시간이 고려되지 않은 월평균 임금에서 p50/10의 임금격차는 급증하고 시간당 임금에서의 임금격차가 감소하는 현상은 하위계층의 근로시간이 짧아진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성별로 나누어 보면 남성과 여성의 임금불평등 추이는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먼저, 남성은 90년대 초반까지 감소하다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전체 불평등 추세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시간당 임금에서 2008년 이후 p90/10, p50/10이 하락추세를 보이고 p90/50은 둔화된 특징도 함께 나타냈다. 월평균 임금의 경우 90년대 초반까지 분위별 격차가 감소하다 이후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는 점과 2008년 이후 모든 분위에서 격차가 감소하였지만, 2011년에 p90/10과 p90/50이 증가한 경향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시간당 임금으로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하위계층에서 임금의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영향으로 p50/10과 p90/10의 격차가 감소추세를 이어간 반면, 상위계층에서의 회복이 미진한 영향이 반영되어 p90/50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중/하위(p50/10)계층의 임금격차는 시간당 임금으로 보나 월평균 임금으로 보나 최고점을 기록했

[그림 2] 남성 분위수 배율(시간당 임금/월평균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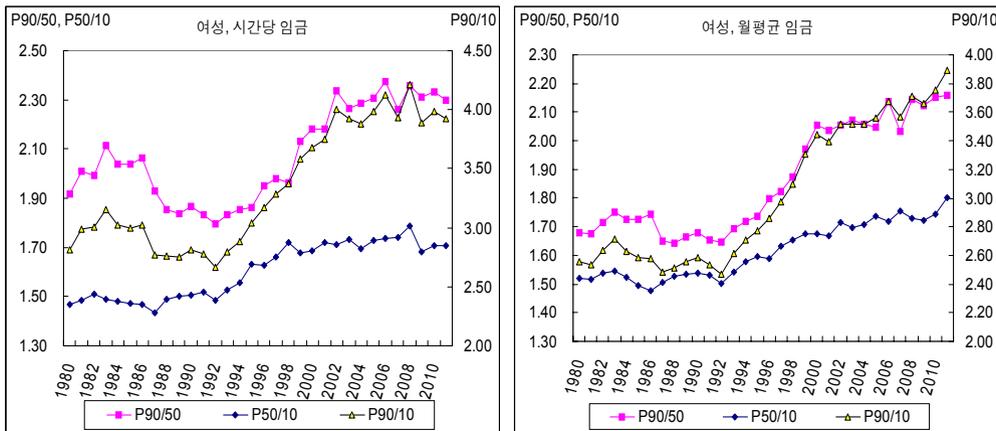


주: 임금총액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 각 연도.

던 80년대 초반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다.

여성은 전체 또는 남성의 임금불평등 추세와는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그림 3 참조). 여성 시간당 임금으로 보면 p90/10과 p90/50에서 1992년까지 어느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하락의 폭이 남성보다 크지 않았다. 이후 임금격차는 2002년까지 가파르게 증가하여 80년대 초반의 정점을 크게 넘어섰고, 이후에는 일정한 격차수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중/하위(p50/10)계층의 임금불평등 추세는 80년대 이후 완만하게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009년 감소한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 남성과

[그림 3] 여성 분위수 배율(시간당 임금/월평균 임금)



주: 임금총액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 각 연도.

달리 p90/10, p90/50의 임금격차가 중/하위(p50/10)계층의 임금격차보다 일관되게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보이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와 동시에 고학력화가 진행된 영향으로 상위계층의 임금상승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근로시간이 통제되지 않은 여성 월평균 임금과 시간당 임금의 경향은 대체로 유사하다. 그러나 시간당 임금에서는 2008년 이후 분위별 임금격차가 둔화된 경향을 보이는 것과 달리 월평균 임금에서는 지속적으로 계층별 임금격차가 커지고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별 분석에서 남성이 전체의 추세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월평균 임금으로 분석하나 시간당 임금으로 분석하나 유사했다. 따라서 다음의 분석에서는 비농전산업 10인 이상 남성의 시간당 임금을 중심으로 분석하도록 한다.

Ⅲ. 특성별 임금불평등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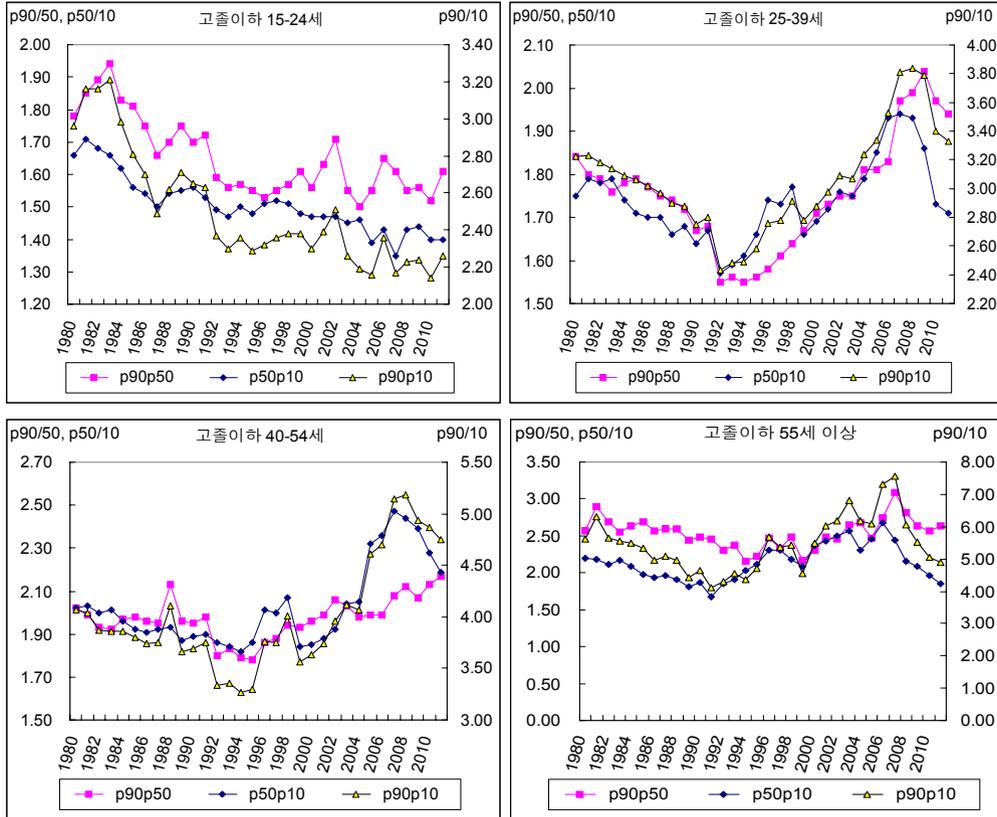
이 장에서는 임금불평등의 장기추이를 인구학적, 사업체특성 집단별로 구분해 각 집단 안에서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분석하도록 한다.

인구학적 특성 중 남성의 연령집단은 본격적인 노동시장 진입시기인 25세를 전후로 나누어 15~24세와 25~39세를 구분하였고, 근속도 어느 정도 되고 노동시장에서 비교적 안정적 연령이라 할 수 있는 40~54세와 노동시장에서 은퇴 혹은 재진입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55세 이상으로 나누어 고졸 이하와 초대졸 이상을 살펴보았다.

먼저 [그림 4]의 남성 고졸 이하를 보면, 25~39세는 1992년을 기점으로 p90/10, p90/50, p50/10 모두에서 임금격차가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p90/10과 p50/10은 2008년을 기점으로, p90/50은 2010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하위계층, 중위계층, 상위계층 순으로 임금상승이 이루어진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p90/10, p90/50, p50/10 모두의 계층별로 임금격차가 크게 벗어나지 않고 유사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40~54세는 2004년까지 p90/10, p90/50, p50/10 모두에서 임금격차가 유사한 흐름을 진행해 왔지만 2005년 이후에는 p90/10과 p50/10의 임금격차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2008년 이후 격차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반면 p90/50은 기존의 흐름을 유지하며 완만하게 격차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하위계층은 경기회복의 영향을 받아 p90/10과 p50/10의 임금격차가 줄어들었지만, 중/상위(p90/50)계층의 회복은 아직 덜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남성 고졸 이하의 연령별 분위수 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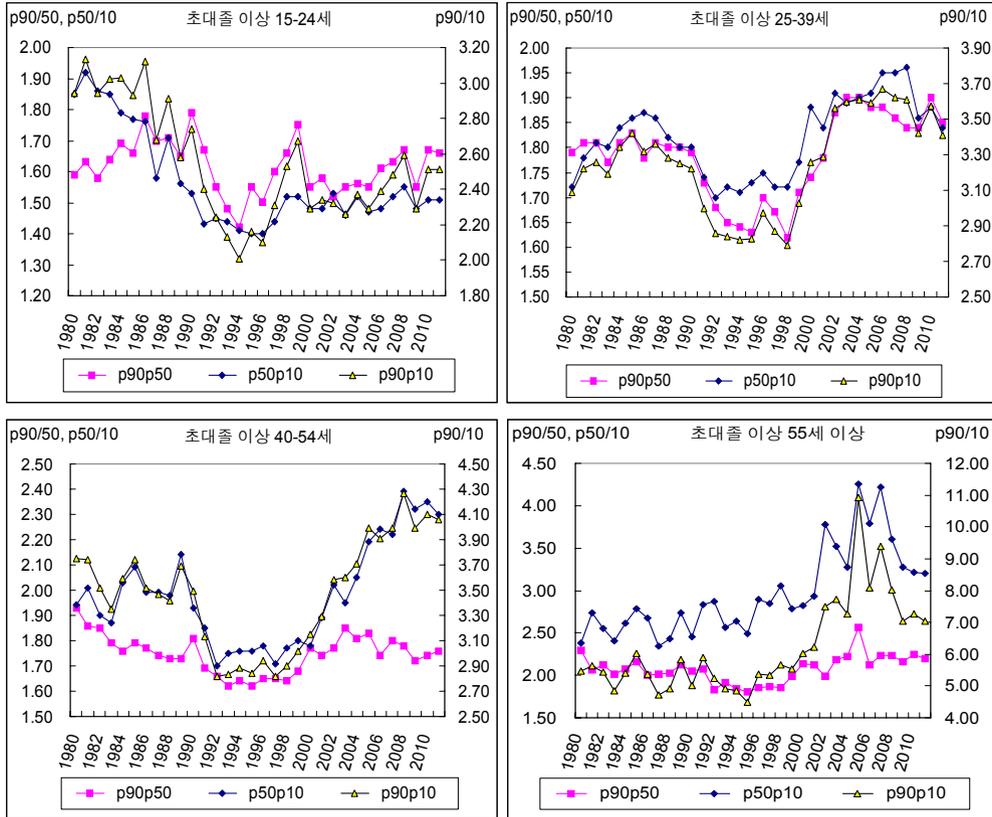


주 : 시간당 임금의 임금총액 기준임.
 자료 :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 각 연도.

주로 은퇴나 은퇴 후 노동시장 재진입을 하는 연령층인 남성 55세 이상 고졸 이하를 보면, 중/상위(p90/50) 임금계층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2000년 이후 완만하게 임금격차가 증가하다가 2007년 크게 증가한 이후 감소하였지만 2009년 이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p90/10과 p50/10은 1992년까지 감소하다가 1993년 이후 증가했으며 2007년 이후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5]의 남성 초대졸 이상을 보면, 25~39세는 90년대 초반 이후 p90/10, p90/50, p50/10 모두에서 임금격차가 감소하였고 외환위기 이후 추세를 뒤집고 증가세로 전환하였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 감소하는 등 전체적인 흐름을 함께하고 있다. 40~54세는 p90/10과 p50/10의 흐름은 거의 같을 정도로 유사하지만, p90/50은 전혀 다른 추세를 보이고 있다. p90/10과 p50/10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임금격차가 가파르게 증가하다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면, p90/50은 외환위기 이후 임금격차가 소폭 증가했지만 2000년대 초반 이후 완만하게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5] 남성 초대졸 이상의 연령별 분위수 배율



주: 시간당 임금의 임금총액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6]에서 산업별로 보면, 남성 제조업의 경우 남성 전체의 추세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1994년 이후 p90/10, p90/50, p50/10의 격차가 거의 없이 유사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8년 이후 분위수별로 격차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하위(p50/10)계층의 임금 격차는 많이 감소하였지만, p90/10, p50/10은 2009년에 감소한 이후 증가세로 반전하였다. 건설업은 분위별 격차의 차이도 많고 시기에 따른 등락도 크게 변동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7년에는 p90/10, p90/50, p50/10 모두 임금격차의 고점을 기록한 이후 크게 감소하였고, 2010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서비스업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여 보았다. 이때의 분류는 1993년 이후부터 유사한 세부산업으로 임의 분류한 것으로 아주 정확한 매칭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생산자서비스(사업서비스+금융 및 보험업+부동산 및 임대업)는 기존 남성의 추세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p90/10, p50/10은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해 2003년 정점을 찍은 이후 2010년까지 지속적으

로 감소한 반면, p90/50은 완만한 증가 및 둔화를 지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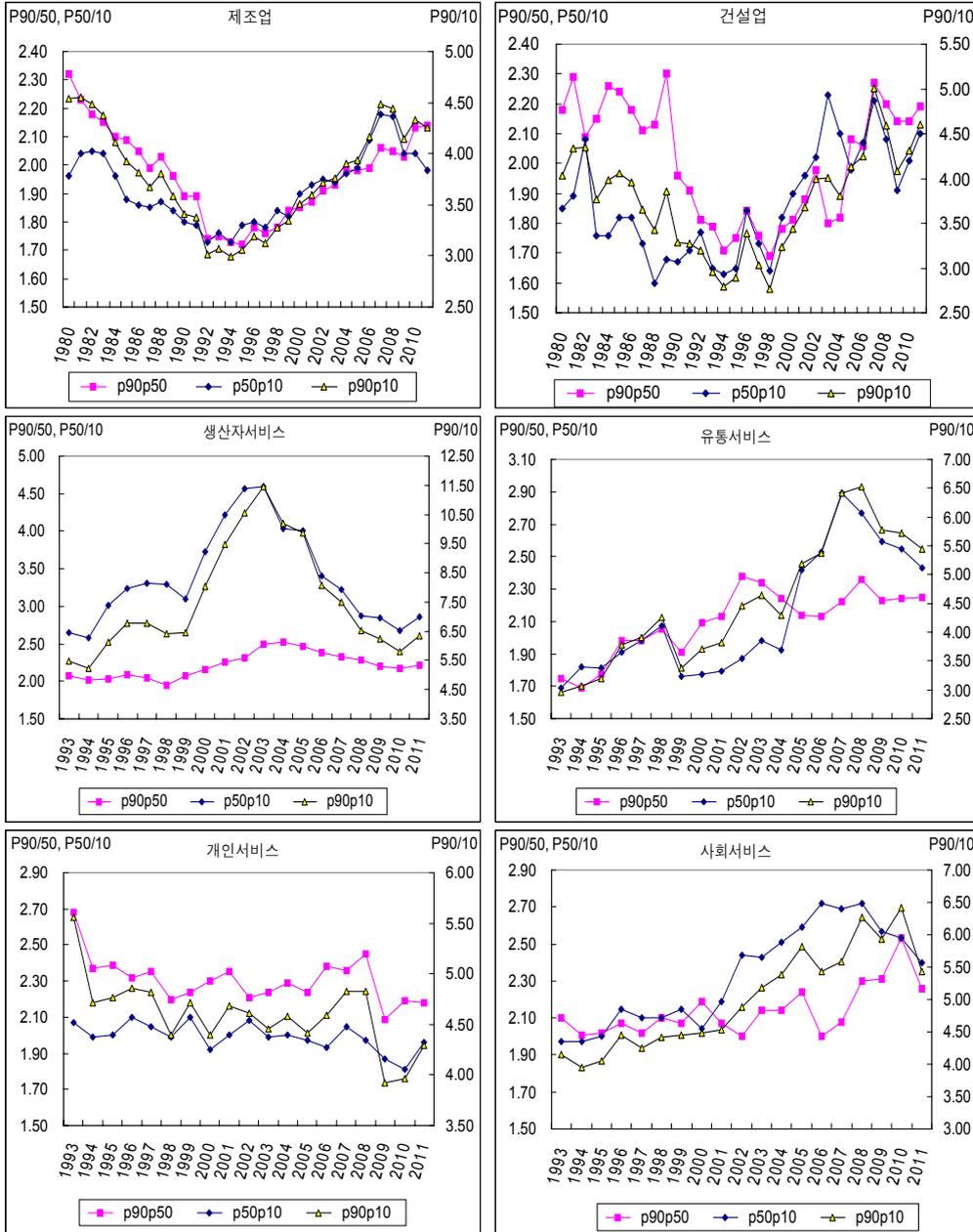
한편 유통서비스(도소매업+운송업+통신업)는 외환위기 이전까지 p90/10, p90/50, p50/10의 임금격차가 거의 유사하게 증가하였으나 2000년 이후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p90/10, p50/10은 2005년까지 완만한 증가를 한 이후 급증하였다가 2008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하였지만, p90/50은 외환위기 직후 급격하게 증가한 이후 2000년대 이후 큰 변화 없이 일정한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서비스(숙박 및 음식점업+오락·문화 및 가사서비스업+기타개인서비스업)는 각 분위수에서 경향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임금격차가 일정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나 p90/10, p50/10이 2009년 급감하는 변동을 보인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00년 이후 확장된 사회서비스(공공행정+보건 및 복지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기타사회서비스업)는 외환위기까지 p90/10, p90/50, p50/10 모두 일정한 격차를 지속하였지만, 2000년 이후 p90/10, p50/10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 2009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하였고, p90/50은 완만한 증가를 유지하다 2007년부터 임금격차가 커졌으나 2011년 감소했다.

[그림 7]에서 직업별로 보면, 관리자 및 전문가, 사무직, 기능·장치 및 기계조립에서 p90/10, p90/50, p50/10 모두 공통적으로 임금격차가 2007~2008년까지 빠르게 증가하다 2008년 이후 다른 추세로 전환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관리자 및 전문가의 경우 p90/10, p90/50, p50/10 모두 2008년 이후 감소했지만 2010년 다시 증가한 후 2011년 감소했다. 사무직은 2008년 p90/10, p90/50, p50/10 모두 2009년 임금격차가 감소했지만, 2009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하였다. 기능·장치 및 기계조립의 양상은 앞서 본 두 직업과 다르게 매우 흥미롭게 변했다. p90/50은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임금격차가 증가했고 이후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p90/10과 p50/10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p50/10의 감소폭이 매우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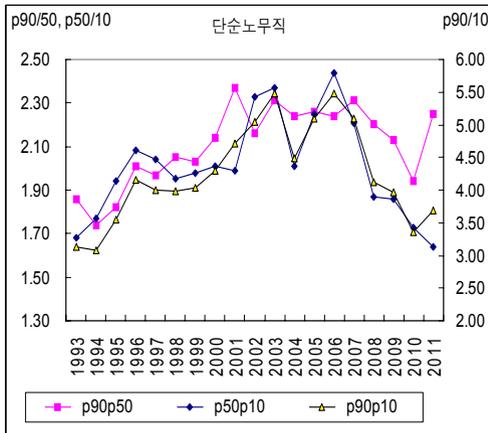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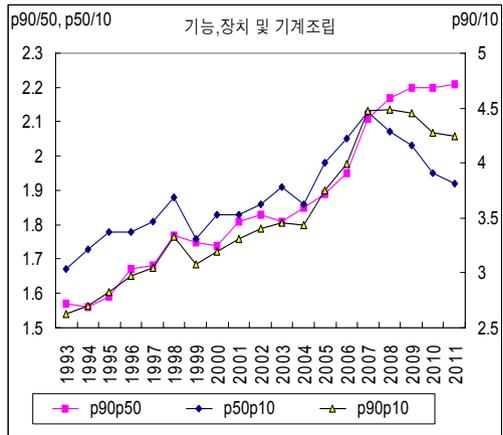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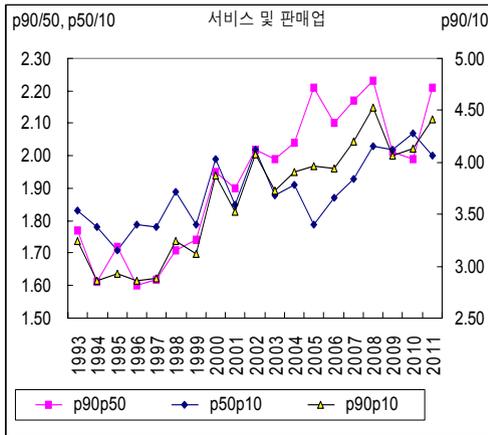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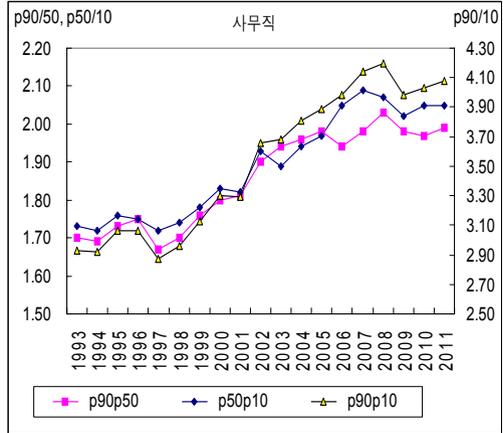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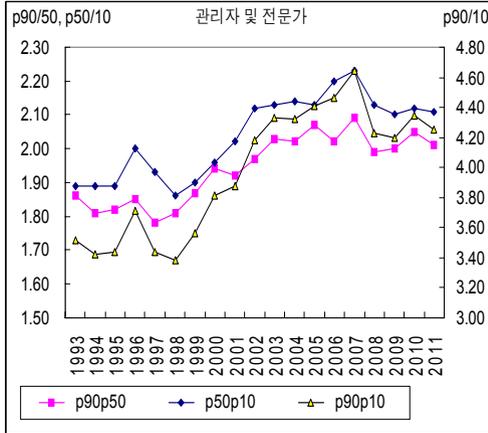
서비스 및 판매업은 등락을 반복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분위에서 임금격차가 증가하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단순노무직은 2003년까지 p90/10, p90/50, p50/10의 임금격차가 유사한 흐름을 보였지만 이후에는 p90/10과 p50/10은 추세를 함께하며 2007년 이후 가파르게 임금격차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p90/50은 2003~2007년까지 임금격차를 일정하게 유지하다 2008년 이후 감소추세를 유지하였고 2011년에는 증가로 반전되었다.

[그림 6] 남성 산업별 분위수 배율



주: 1) 시간당 임금의 임금총액 기준임.
 2) 생산자서비스=사업서비스+금융 및 보험업+부동산 및 임대업, 유통서비스=도소매업+운송업+통신업, 개인서비스=숙박 및 음식점업+오락,문화 및 가사서비스업+기타개인서비스업, 사회서비스=공공행정+보건 및 복지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기타사회서비스업임.
 3) 서비스업의 네 가지 분류는 1993년 이후부터 유사한 산업으로 임의 분류한 것으로 아주 정확한 매칭은 아님.
 자료: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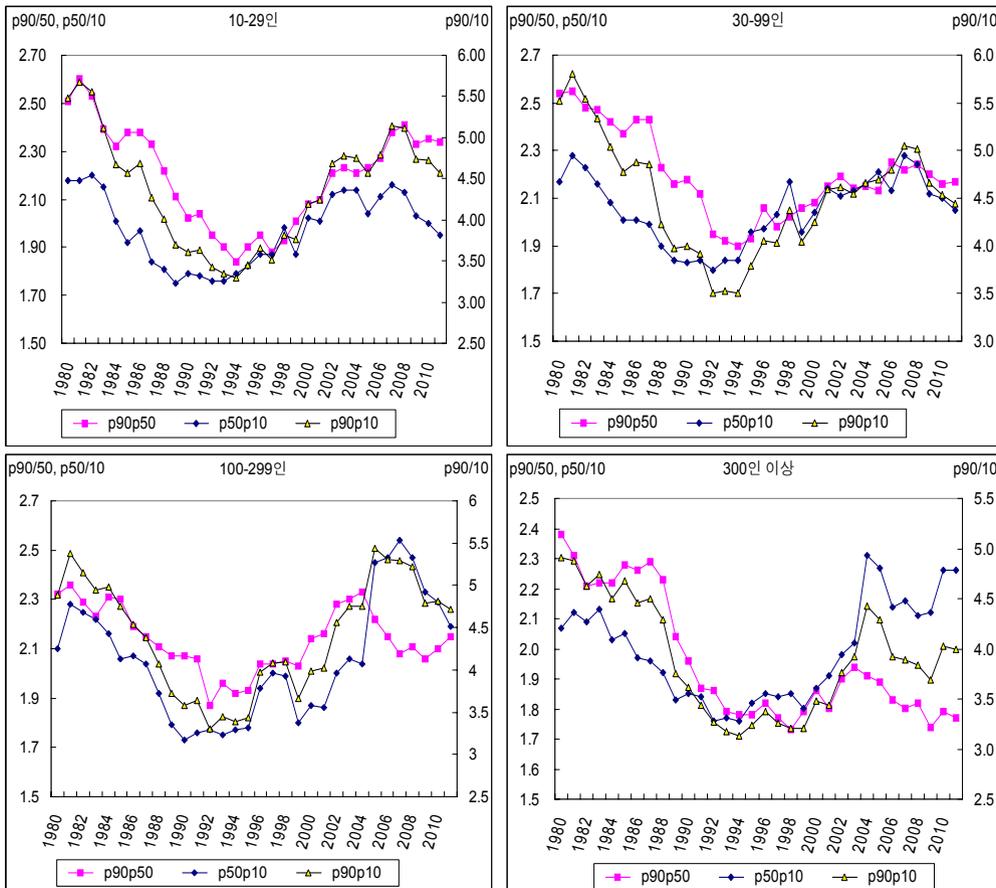
[그림 7] 남성 직종별 분위수 배율



주 : 1) 시간당 임금의 임금총액 기준임.
 2) 농림어업 숙련자는 제외함.
 자료 :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 각 연도.

사업체특성의 마지막인 규모별 분위수 배율을 보면 사업체 규모별로 임금불평등이 다른 추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그림 8 참조). 먼저 10~29인 규모는 1994년 이전 모든 분위수의 임금격차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임금격차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다가 1995~2002년까지 비슷한 흐름을 보였고, 2003년 이후 다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p50/10의 임금격차가 가장 적고 p90/50의 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금융위기 이후 하위그룹의 임금상승의 영향으로 p50/10과 p90/10의 임금불평등은 감소하는 경향을 지속하고 있는 반면, p90/50은 2009년 감소한 이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99인 규모는 1994년 이후 임금불평등이 완만하게 증가하다 2008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모든 분위수의 임금격차가 거의 같은 수준에서 움직이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8] 남성 규모별 분위수 배율



주: 시간당 임금의 임금총액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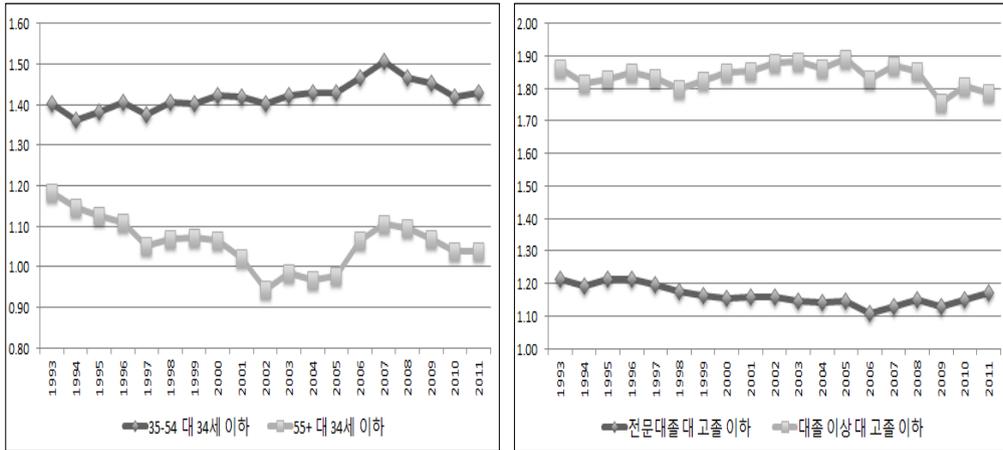
100~299인 규모는 2004년까지 모든 분위의 임금격차 경향이 대체로 유사하게 흐르다가 2005년 p90/50은 감소추세로 전환한 것과 달리 p90/10과 p50/10의 임금격차는 반대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 p90/10과 p50/10은 2007년 이후 임금격차가 감소추세를 지속한 것과 반대로 p90/50은 2009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하였다. 300인 이상 규모도 2003년까지 모든 분위수의 임금격차가 대체로 유사한 흐름을 보였지만, 2004년 이후 달라졌음을 보이고 있다. p90/50은 2004년을 기점으로 임금격차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p90/10과 p50/10은 2004년 임금격차가 매우 크게 증가한 이후 감소추세로 돌아섰지만 2010년 다시 임금격차는 증가하였다.

IV. 특성 간 임금격차 추이

임금불평등은 개별 집단 안에서 불평등이 증가할 때에도 상승할 수 있지만, 집단 간의 격차가 증가할 때에도 상승할 수 있다. 제III장에서 각 집단 내에서의 임금불평등 추이를 분석했다면, 제IV장에서는 집단 간의 격차 변화를 분석하겠다. 이를 위해 먼저 연령집단을 노동시장 진입과정이 종료되는 34세 이전, 35~54세, 노동시장에서 은퇴, 은퇴 후 재진입 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55세 이상으로 구분해 34세 이전 연령대를 기준으로 각 연령대의 시간당 임금격차 비율을 살펴보았다. 1보다 크면 34세 이하보다 상대임금이 높다는 뜻이고, 1보다 작으면 34세 이하보다 상대임금이 낮다는 뜻이 된다. [그림 9]를 보면 1994년 이래 35~54세의 상대임금은 2007년까지 완만히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여 2011년에는 대략 2000년대 중반 수준의 상대임금을 보이고 있다. 55세 이상의 상대임금은 대체로 2002년경까지 떨어져서 34세 이하보다도 낮은 수준을 2005년경까지 유지하다가 그 이후로 상대임금이 더 높게 유지되고는 있지만, 다시 하락하는 중에 있다. 연령집단 간 격차는 35~54세와 34세 이하를 비교할 경우 전체 임금불평등 흐름처럼 꾸준히 증가하다가 국제금융위기를 계기로 다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유사성이 있다.

학력 간 격차는 고졸 이하 대비 전문대졸의 상대임금, 고졸 이하 대비 대졸 이상 상대임금을 분석하였다. 전문대졸 상대임금은 2006년 정도까지 완만하게 하락, 그 이후 약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보인다. 대졸 상대임금은 2005년경을 정점으로 그 이후 하락하는 추세가 나타난다. 전문대졸의 상대임금은 전체 임금불평등 추세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졸의 상대임금은 시기 차이가 있을 뿐 대체로 증가하다가 최근 몇 년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유사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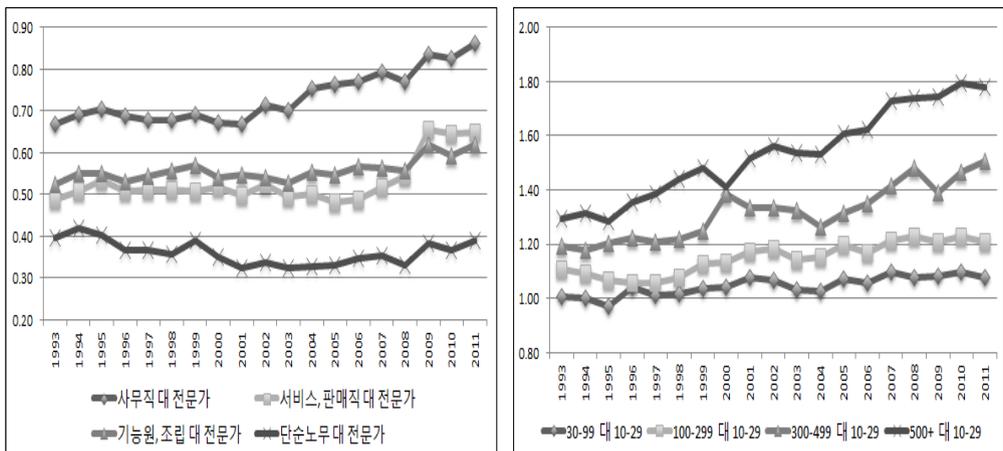
[그림 9] 연령별 시간당 임금 격차 추이(좌)와 학력별 시간당 임금 격차 추이(우)



자료: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각 연도.

[그림 10]에서는 직업별 상대임금을 보고하였다. 전문가(=준전문가+전문가+관리자) 대비 사무직의 상대임금은 사무직이 더 빠르게 임금이 상승하면서 격차가 좁혀지는 모습이 나타나며, 서비스 및 판매직의 전문가 대비 상대임금은 2006년경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다가 그 이후 좁혀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단순노무직 대비 전문가의 상대임금도 2001년까지는 벌어지는 추세였으나 적어도 2008년 이후로는 좁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

[그림 10] 직업별 시간당 임금 격차 추이(좌)와 사업장 규모별 시간당 임금 격차 추이(우)



주: 관리자, 전문가, 준전문가를 합쳐 전문가로 지칭하였음. 이 집단의 평균임금을 분모로, 사무직의 평균임금을 분자로 하여 나눈 값이 사무직의 상대임금임. 나머지 직업의 상대임금도 같은 방식으로 정의되었음. 사업장 규모별 상대임금은 10~29인 규모의 평균임금을 분모로, 나머지 규모를 분자로 하여 계산하였음. 1에 가까워질수록 격차가 줄어드는 것이며, 1에서 멀어질수록 격차가 증가하는 것임.

자료: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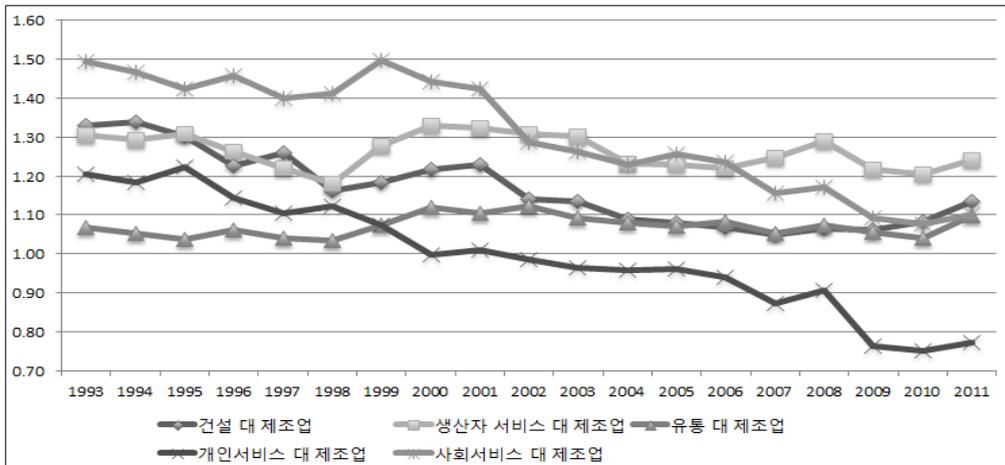
며, 생산직 근로자라 할 수 있는 기능공 및 기계조작 근로자의 상대임금도 2008년 이후로는 좁혀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와 같이 직업별로 보면 장기추세는 직업별로 다소 엇갈리는 모습이지만, 적어도 2008년 이후로는 최상위 직업이라 할 수 있는 전문가 대비 상대임금이 좁혀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10]에서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10~29인 규모를 기준으로 할 때 2009년에 국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일시적 격차감소가 있긴 하지만, 규모가 클수록 최근 추이는 격차가 벌어지는 모습이고, 30~99인이나 100~299인은 적어도 최근 몇 년간은 격차 증가추세가 뚜렷하지는 않은 모습이다. 사업장 규모로는 국제금융위기 이후 불평등 감소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림 11]에서 산업별로 보면 기준으로 삼은 제조업에 비해 개인서비스업은 상대임금이 꾸준히 하락해 최근 들어서는 격차가 증대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업은 상대임금 격차가 크다가 최근으로 올수록 감소하는 추세이다. 나머지 업종에서는 제조업 대비 상대임금 격차에서 뚜렷한 흐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상에서 집단별 시간당 임금 격차 추이를 분석해 보았다. 집단 간 격차에서는 2008년 정도까지 불평등이 증가하다가 국제금융위기 이후 다소 주춤하는 전체 임금불평등 추이가 뚜렷이 재현되지는 않고 있다. 노동시장 중핵연령대의 상대임금, 고졸 대비 대졸자의 상대임금 정도가 유사한 모습을 보이며, 2008년 이후 직업별로 볼 때 전문가 대비 상대임금 격차가 감소하는 것이 그나마 유사한 모습이라 하겠다. 앞서 집단 내 불평등 추이가 일부 집단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임금불평등 추이와 흡사하게 움직였던 것과는 다른 모

[그림 11] 산업별 시간당 임금 격차 추이



주: 제조업의 평균임금을 분모로, 사무직의 평균임금을 분자로 하여 나눈 값이 사무직의 상대임금임. 나머지 산업의 상대임금도 같은 방식으로 정의되었음.
 자료: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각 연도.

습이다. 이는 전체적인 우리나라 임금불평등 추이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 집단 간 격차의 설명력이 집단 내 격차 증대의 설명력에 비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며, 따라서 집단 간 격차 증대에 주목하는 것보다 대다수의 집단 안에서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경제 전체적인 변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임금불평등을 이해하는 데에 더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V. 분포 변화는 임금불평등 추세를 얼마나 설명하는가?

고령자 집단은 커리어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과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커리어의 시작 단계에 있는 젊은 층에 비해 임금불평등이 높은 경향이 있다. 지난 몇 년간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다른 조건에 변화가 없어도 고령화만으로도 임금불평등은 증가하게 되어 있다. 또한 대체로 고학력 집단은 저학력 집단에 비해 임금불평등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고학력 집단은 저학력 집단에 비해 신입사원으로부터 최고경영층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분포하는 경향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학력자 비중이 증가하는 고학력화도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임금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또한 제조업은 서비스업에 비해 임금불평등이 적은 산업이다. 제조업은 서비스업에 비해 비정규직 비중이 대체로 낮은 경향이 있고, 제조업의 특성상 금융업처럼 고액 연봉자 비중이 높지 않은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업종에 비해 생산방식의 특성상 유사한 일을 하는 비교적 동질적인 집단이 대규모로 존재해 임금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 특성도 강한 편이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제조업 고용비중이 줄어드는 산업의 서비스업화 경향도 임금불평등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와 같이 다른 조건이 동일해도 인구적, 산업적 변화가 생긴다면 임금불평등이 강화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이와 같은 분포 변화가 우리나라 임금불평등 심화를 얼마나 설명하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분석을 위해 Dinardo, Fortin & Lemieux(1996)의 방법론(이하 DFL)을 활용하였다. 만약, 두 시점(1998년, 2011년)의 임금불평등을 비교할 때, 2011년의 학력분포, 연령분포 등이 1998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개인이 받는 임금수준을 2011년에 고정한다면, 1998년의 임금불평등은 어떻게 변할까 같은 질문에 대답을 해준다.²⁾ 이때의 임금수준이란 이를테

2) 이 연구에서 활용하는 데이터는 횡단면 자료이기 때문에 같은 개인의 연도 간 비교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Dinardo et al.(1996)은 이러한 상황에서 성향점수 매칭으로 얻은 성향점수를 가중치로 활용하여 상이한 개인들의 특성을 일치시키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논문을 참조.

면 50세 대졸자 근로자인 A씨의 시간당 가격 또는 임금률(wage rate)의 의미를 갖게 된다.³⁾ 이하에서 표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실제 시간당 임금을 지칭할 때는 시간당 임금이라는 표현을, DFL을 적용할 때에는 시간당 가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겠다. <표 2>를 보면 1998년 분위별 로그 실질 시간당 임금 및 각 분위격차가 “1998년 실제” 란에 보고되어 있다. “2011년 실제” 란에 보고되어 있는 수치는 2011년 분위별 로그 실질 시간당 임금 및 각 분위격차이다. “1998년 학력 및 연령분포에 2011년 임금 적용” 란은 1998년과 학력 및 연령이 동일하고, 각 개인이 받는 시간당 가격은 2011년 수준이라면 각 분위 임금과 분위별 임금격차는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1998년 실제 p90/10 격차는 1.45였고, 2011년 실제 p90/10 격차는 1.61이었는데, 1998년 분포에 2011년 임금을 적용하면 p90/10 격차가 1.49로 변화하게 된다. 분포는 그대로, 시간당 가격만 2011년 수준으로 바뀐 것이므로 실질 시간당 가격수준 변화로 1998년과 2011년 임금불평등 증가의 대략 25%⁴⁾ 정도가 설명되는 셈이며, 나머지 75% 정도가 두 시기 사이에 발생한 분포 변화로 설명되는 셈이다. 즉 나머지 75% 정도가 두 시기 사이에 고연령, 고학력자가 증가했기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학력, 연령만이 아니라 업종, 직종, 사업장 규

<표 2> 1998년과 2011년 임금불평등 비교

	1998년 실제	1998년 학력 및 연령분포에 2011년 임금 적용(가)	1998년 분포에 2011년 임금 적용(나)	2011년 실제
1분위임금	1.52	1.81	1.83	1.85
5분위임금	2.29	2.48	2.55	2.63
9분위임금	2.97	3.30	3.35	3.46
p50/10	0.77	0.67	0.71	0.79
p90/50	0.68	0.82	0.81	0.83
p90/10	1.45	1.49	1.52	1.61

주: (가)는 학력과 연령 분포만 1998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한 경우. (나)는 학력, 연령, 업종, 직종, 사업장 규모가 1998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한 경우. 산업은 제조업, 건설업, 생산자서비스, 개인서비스, 유통서비스, 사회서비스로 구분. 직업은 전문가(관리자+전문가+준전문가), 사무직, 서비스 및 판매 근로자, 기능원 및 장치기계 조작원, 단순노무직으로 구분. 중간에 표준산업분류와 표준직업분류가 변경(2002년, 2009년에 변경된 분류 적용됨)되어 가능한 선에서 맞춘 것이므로 정확하게 구분되었다고 할 수는 없음.

- 3) 이 방법론을 사용하면 개별 개인의 시간당 가격이 평균치로 변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시간당 가격이 그대로 이용되기 때문에 학력, 연령 같은 관찰된 개인 특성과 연관된 시간당 가격만이 아니라 자료상에서는 관찰되지 않는(인맥이나 학벌, 과거 직장 경력 같은) 개인별 차이로 인한 시간당 가격도 그대로 보존되는 장점이 있다.
- 4) 2011년 9대1 격차 1.61에서 1998년 9대1 격차 1.45를 빼면 대략 0.16 정도의 불평등 강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1.49에서 1.45를 빼면 0.04로 대략 1/4 정도를 임금 변화가 설명하는 셈이 된다. 그래서 25% 정도가 설명된다고 서술하였다.

모도 1998년 수준으로 맞출 경우('나' 참조) p90/10 격차는 1.52로 변한다.)⁵⁾ 추가로 일치시키는 변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분포 변화의 설명력이 커지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작아졌다. 총 0.16 변화했는데 0.7 정도가 시간당 가격 변화로 인해, 0.9 정도가 분포 변화로 인해 변화된 것으로 파악되므로, 대략 56%가량이 분포 변화의 효과로 결론지을 수 있겠다.

그런데 이는 p90/10 격차를 분석했기 때문으로, 중간 분위(5분위)를 고려하면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p90/50 격차는 1998년 분포에 2011년의 시간당 가격을 적용할 경우 0.82 또는 0.81로 나타난 2011년 실제치와 거의 차이 없는 결과를 보인다. 이는 곧 2011년의 시간당 가격 격차가 1998년과 2011년 p90/50 격차 차이의 거의 대부분을 설명한다는 의미가 된다. 그만큼 1998년의 시간당 가격에 비해 2011년의 시간당 가격 격차가 커졌다는 의미가 된다. 반면 p50/10 격차는 1998년 분포에 2011년 시간당 가격을 적용할 경우 0.77 → 0.67 또는 0.71로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현상은 2011년 시간당 가격의 격차가 적어도 p50/10 격차에서는 1998년보다 작았기 때문에 나타난다. 1998년 실제치와 2011년 실제치를 비교하면 0.77 → 0.79로 임금불평등이 소폭 증가했는데, 시간당 가격의 변화로는 이것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는 곧 이 시기 사이에 발생한 분포 변화가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시간당 가격 격차는 1998년에 비해 2011년에 감소했지만, 분포 변화는 2011년의 임금불평등이 적어도 p50/10 격차에서 1998년 실제치보다 다소 증가하는 힘으로 작용했다는 의미이다. 결론적으로 p90/50 격차 변화는 분포 변화로는 거의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었으나, p50/10 격차 변화는 분포 변화가 설명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다.

<표 3> 1998년과 2008년 임금불평등 비교

	1998년 실제	1998년 학력 및 연령분포에 2008년 임금 적용(가)	1998년 분포에 2008년 임금 적용(나)	2008년 실제
1분위임금	1.52	1.72	1.75	1.79
5분위임금	2.29	2.54	2.62	2.67
9분위임금	2.97	3.37	3.43	3.50
p50/10	0.77	0.82	0.87	0.88
p90/50	0.68	0.83	0.81	0.83
p90/10	1.45	1.65	1.68	1.71

주: (가)와 (나)의 설명은 <표 2>의 주를 참조.

5) 이 사이에 업종과 직종 분류가 변했기 때문에 정확히 일치시킬 수 없어 가능한 선에서 제조업, 건설업, 생산자서비스, 개인서비스, 유통서비스, 사회서비스를 구분하여 일치시켰고, 직종은 전문가(관리자+전문가+준전문가),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기능원 및 장치기계조작원, 단순노무직으로 구분 후 일치시켰다. 규모는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으로 구분하여 일치시켰다.

2011년은 2008년 말~2009년 초에 있었던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극심한 고용침체를 지난 후 임금불평등이 다소 감소한 국면이다. 2008년은 여러 자료를 종합해 볼 때 가장 임금불평등이 높은 시기로 보이는데, 이 해를 1998년과 비교해 보면 <표 3>에서와 같이 다소 다른 결론을 얻게 된다. 이를 보면, 1998년 p90/10 격차는 1.45였던 데에 비해 2008년 p90/10 격차는 1.71로 증가하였다. 1998년과 동일한 분포에 2008년의 시간당 가격을 적용할 경우 p90/10 격차는 1998년 실제치에 비해 1.65나 1.68로 약 0.2 정도 증가한다. 실제치의 전체 변화는 0.26이므로 대부분이 분포 변화가 아니라 시간당 가격 격차 변화에 의해 설명되는 셈이 된다. 따라서 1998~2008년 사이의 임금불평등 증대에 고령화나 고학력화, 서비스업화 같은 분포 변화 요인이 기여한 것은 맞지만, 그 역할은 제한적이었다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2008년과 2011년을 비교해 보면, 임금불평등이 2011년에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주로 p50/10 격차가 줄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데, 2008년의 학력·연령분포에 2011년의 시간당 임금을 적용할 경우 p90/10 격차는 2011년 실제치보다 더 낮은 1.56으로 하락하고, p50/10 격차와 p90/50 격차도 마찬가지로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의 의미하는 바는 2008년에 비해 2011년에 고령화와 고학력화로 다른 조건이 같다면 보다 불평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임금근로자 분포가 변화했지만, 2011년의 시간당 가격은 2008년보다 현저히 불평등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실질 시간당 분위별 임금을 볼 경우 1분위 임금은 2008년보다 2011년에 뚜렷한 개선이 있었지만, 5분위나 9분위 임금은 그렇지 않은 점이 관찰된다. 이를 보면, 국제금융위기 이후 고임금층이나 중간 임금층의 경우 임금 인상이 활발하지 않은 데에 반해, 저임금층은 지속적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의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나 저임금 일자리 수요 증가의 영향 등으로 시간당 임금

<표 4> 2008년과 2011년 임금불평등 비교

	2008년 실제	2008년 학력 및 연령분포에 2011년 임금 적용(가)	2008년 분포에 2011년 임금 적용(나)	2011년 실제
1분위임금	1.79	1.86	1.86	1.85
5분위임금	2.67	2.60	2.60	2.63
9분위임금	3.50	3.42	3.41	3.46
p50/10	0.88	0.74	0.73	0.79
p90/50	0.83	0.82	0.81	0.83
p90/10	1.71	1.56	1.55	1.61

주: (가)와 (나)의 설명은 <표 2>의 주를 참조.

이 증가한 것이 임금불평등 지표 개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가능하다.⁶⁾

2008년과 2009년을 비교해 보아도 <표 4>와 유사한 결론이 도출된다. 2008년의 p90/10 격차는 1.71이었으나 1년 뒤인 2009년에는 1.63으로 하락하였다. 2008년의 분포에 2009년의 임금을 적용하면 2009년 실제치보다 더 작은 p90/10 격차를 보인다. 이는 결국 분포는 다소 불평등한 방향으로 이동했지만,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실질 임금 감소가 주로 5분위나 9분위에 크게 영향을 미친 관계로 분포를 2008년 수준에 고정시키고 2009년의 시간당 임금을 적용하면 더 불평등이 감소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이상에서 임금불평등 변화에 대한 연령, 학력, 업종, 직종, 사업장 규모 분포 변화의 영향력을 검토해 보았다. 이는 고령화, 고학력화, 서비스업화, 전문직 비중 증가 등의 임금 불평등에 대한 영향을 보여주는데, 대체로 분포 변화는 임금불평등을 강화시키는 양상을 보이지만, 분포 변화는 시간당 가격 변화에 비해서는 설명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제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국제금융위기 이후에는 임금불평등 지수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시기 분포 변화는 임금불평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임금불평등 개선을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2008년과 2009년 임금불평등 비교

	2008년 실제	2008년 학력 및 연령분포에 2009년 임금 적용(가)	2008년 분포에 2009년 임금 적용(나)	2009년 실제
1분위임금	1.79	1.78	1.79	1.79
5분위임금	2.67	2.59	2.58	2.62
9분위임금	3.50	3.40	3.39	3.42
p50/10	0.88	0.81	0.80	0.83
p90/50	0.83	0.81	0.80	0.80
p90/10	1.71	1.62	1.60	1.63

주: (가)와 (나)의 설명은 <표 2>의 주를 참조.

6) 미국에서는 중간 숙련 일자리가 감소하고 저숙련, 고숙련 일자리 수요가 증가한 관계로 저임금층과 고임금층의 임금이 증가해 5대1 격차는 감소하고 9대5 격차는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는 주장이 있다. 이 설명은 미국 임금불평등의 90년대 이래 전개양상을 설명하는 데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이론인데, 이를 일자리 양극화론(job polarization)이라 한다.

VI. 맺음말

지금까지 임금불평등의 장기 추이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대상으로 삼은 1980년 이래 1993년 또는 1994년 정도까지 임금불평등이 감소하다가 그 이후 증가하기 시작했고, 특히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몇 년간 크게 증가하였다. 2008년 말 국제금융위기 이후에는 자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보면 임금불평등이 약간 감소한 상태에서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임금불평등 증가 국면에만 국한해서 보면 인구학적, 사업체 특성 간의 격차 변화는 대졸 대 고졸 이하, 35~54세 대 34세 이하, 2008년 이후 직종 간 격차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체 임금불평등 변화와 추세가 다르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임금불평등 증가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고학력화, 서비스산업화 같은 분포 변화의 영향도 검증결과 부분적인 설명력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결국 경제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는 게 중요함을 의미한다. 그런 요인의 후보로는 기술변화나 세계화(해외아웃소싱 증대 같은)로 인한 숙련별 노동수요에서의 근본적인 변화, 최저임금 변화나 노조 약화 같은 제도 변화 등이 있을 것이다.

미국발 부동산 거품 붕괴로 시작된 국제금융위기는 선진산업국가의 자산 거품 붕괴, 재정위기 등으로 이어져 세계적인 저성장으로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제금융위기는 임금삭감 및 주로 비정규직에 집중된 것으로 추측되는 고용조정 형태가 노동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2009년부터의 임금불평등 추이를 보면 다소간의 지표개선이 나타나는데, 이는 분포를 통제된 상태에서 각 분위별 임금 동향을 볼 때 주로 하위임금계층에서 임금이 꾸준히 회복, 상승하고 그 이상 계층에서 그만큼 상승하지 못한 것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국제금융위기로 타격을 받은 분야가 금융·부동산 같은 자산 관련 분야나 일부 품목을 제외한 수출 같은 국제화된 분야라는 측면에서 보면 임금이 중간 이상인 층에서 국제금융위기 이전과 같은 큰 폭의 임금 상승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 이해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다만, 이와 같은 추측이 맞다면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아니라 경기의 특성으로 인한 일시적 정체이므로 이후 임금불평등의 추가적인 악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는 직장 근속기간, 비정규직 확대 같은 몇 가지 요인의 영향은 분석하지 않았다. 비정규직 증대의 영향으로 노동시장 전체적으로 직장 근속기간 분포가 변화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근속은 우리나라 임금결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므로 연령, 학력, 산

업, 직업, 사업장 규모만 대상으로 삼았을 때 도출된 본 연구의 분포 변화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결론은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근속은 고령화나 고학력화와는 달리 기업의 내부노동시장 운영전략의 결과로 변화되므로 분포 변화의 일부로 다루기에는 의미가 좀 다를 수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추후 과제이다.

<참고문헌>

Dinardo, John, Nicole M. Fortin, and Thomas Lemieux(1996),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the Distribution of Wages, 1973-1992 : A Semiparametric Approach,” *Econometrica* 64(5), pp.1001~1044.

